

탈북 이주민들의 환상과 부적응: 남한사회의 인식혼란과 그 영향을 중심으로*

정병호**

1. 서론: 한 탈북청소년의 죽음

원산 출신의 한 탈북청소년이 죽었다. 이름은 김철(가명). 열아홉살이었다. 죽은 곳은 제주도. 한적한 6차선 대로변, 전봇대를 들이받은 마운틴바이크형 오토바이가 어처구니없는 사고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남한에 온 지 꼭 1년 반 만인 2003년 1월 13일이었다.

“우리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가 죽었어요.” 탈북청소년들을 성심으로 지도해주던 남한의 한 여선생님이 장례식장에서 흐느끼며 말했다. 나이에 걸맞지 않는 넥타이 양복차림의 앳된 소년의 사진을 쳐다보며 중국에서 함께 떠돌던 동무들이 몸부림치며 넋두리를 한다. “이 새끼야

* 이 연구는 2001년도 한양대학교 교수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논문의 일부는 2003년 한국사회학회/한국문화인류학회 공동 심포지움, “한국의 소수자, 실패와 전망”에서 발표하였다. 발표장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문을 해주신 분들과 초고를 읽고 귀중한 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 한양대학교 국제문화대학 문화인류학전공 교수

두만강 넘어오다 빠졌을 때 그때 죽지 왜 지금 죽니?“, “보위부 수용소에서 며칠 못 먹고 온 몸이 피멍이 들게 맞아 축 늘어져 있었을 때 거기서 죽지 왜 여기서 죽니?”

철이는 15살 때부터 한 살 위 사촌형과 고향을 떠나 중국 각지를 헤매고 다녔다. 그 후 몇 차례 국경을 넘나들다 잡혀서 고생도 했고, 남한에 오기 전에는 부모님들께 마지막으로 돈이나 전해 준다고 중국 심양에서 원산 고향집까지 갔다가 차마 남조선으로 간다는 말은 꺼내지도 못하고 떠나왔다고 한다. 바로 재작년 봄의 일이었다.

남한 사회는 철이에게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 한라산이 보이는 13평 임대 아파트, 냉장고, 칼라TV, 비디오, 침대, 최신형 컴퓨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오토바이까지 모두 혼자 “자기 것으로 가질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적 풍요와 함께 철이는 외로움과 소외, 경쟁과 차별 같은 이전에는 사치로만 알았던 새로운 심리적 억압과 공포를 경험하게 되었다.

남한 사회는 남한 사회의 방식대로 꼭 그 수준만큼 철이를 위해 주었다. 철이는 함께 온 사촌 형제를 부산과 제주로 따로 따로 배치한 무심한 정책집행과 19세 청년을 북쪽에서의 최종 학력에 맞춰 초등학교 6학년으로 편입하라고 하는 기계적 학벌주의에 묶여 늘 답답해 했다. 처음엔 귀순용사처럼 환영하면서 양복도 맞춰주고 롯데월드와 63빌딩을 구경 시키며 남한의 중산층 이상의 삶이 가능할 것 같이 여기게 해놓고 결국은 이 사회의 영세민으로 업신여김을 당하게 될까봐 전전긍긍하게 만들었다.

남한 사회의 배려와 온정도 탈북자들의 삶을 시들고 피폐하게 만들기 일수였다. 매주 자기 교회에 나와 출석을 부르면 한 달에 20만 원을 주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경쟁적으로 50만 원을 주는 교파도 있다. 그나마 많은 교인들 앞에서 북에서 못 먹고 못 입던 이야기, 떠돌며 빌어먹던 이야기, 이렇게 살려주셔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모멸감을 참으며 되풀이

하는 신앙간증에 대한 대가였다.

김정고시를 준비하려고 학원에 가봐도 생소한 지식만 물어보는 이상하게 꼬인 시험문제들을 풀어야 했고, 이상한 억양으로 말한다 고 놀리고 '왕따' 시키는 철없는 남한 아이들을 대해야 했다. 그나마 시간당 2,000원의 주유소 일이나 신나게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배달 일을 하면서 만난 남한의 이른바 폭주족이나 불량청소년들과는 자주 대판 싸우기는 해도 서로 비슷한 절망감과 답답한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이는 죽었다. 자살 같은 죽음이라고 했다. 텅 빈 철이의 아파트 방벽에는 154cm의 19세 청년이 매일 자기키를 대보던 어린이용 키재기 줄자와 하나원의 하나둘학교에서 함께 있던 탈북한 친구들이 서로 앞날을 기약하며 써준 글과 사진이 붙어 있었다. 철이의 장례식장은 각급 기관장들이 보낸 화려한 국화 화환들로 에워싸여 있었다.

철이의 죽음은 탈북자에 대한 남한 사회의 인식혼란과 상호 모순적 대응방식, 그리고 그 영향으로 탈북자 스스로가 겪는 정체성의 혼란과 문화충격이 빚은 비극적 결과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이다. 철이는 짧은 기간에 너무도 극적인 환경변화와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극심한 기근을 겪고 있던 북한에서 집과 학교를 떠나 '꽃제비(거지)'로 떠돌다가 두만강을 건넜다. 중국에서 법적으로는 '불법체류자', '유랑민'이 되었고, 이들을 '인도적 난민' 혹은 '식량난민'으로 여기고 구호활동을 하던 선교사들에 의해 비밀고아원에서 보호되며 성경공부를 하였다. 남한으로 가기를 결심하고 여러 나라의 국경을 넘으며 '망명자'가 되었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하자 '북한이탈 귀순동포'가 되어 귀순용사들처럼 양복을 입고 서울의 화려한 곳들을 돌아보았다. 통일부 하나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으로 교육받고 꿈에도 만져보지 못했던 액수의 정착금을 받아 한 순간에 부자가 된 것 같았지만, 영구임대주택의 '영세민'이 되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받는 생활비를 받게 되었다. 교회에

서는 자주 신앙간증을 하는 ‘특별한 교인’이지만, 학교를 못 가는 ‘탈학교 청소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밤에는 오토바이를 타는 ‘폭주족’이 되었다.

이 모든 변화가 1~2년 안에 일어난 것이다. 이 짧은 기간에 한 개인이 자신의 지식과 체험을 통해 환경변화의 의미를 인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더욱이 자신에 대한 주변의 인식이 혼란되어 있거나 서로 다른 기대를 갖고 상호 모순된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상황에 대한 적응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이 글은 탈북자들에 대한 남한 사회의 인식변화와 남한 내 사회 집단간의 인식 차이에 주목하여,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차이에 기인한 탈북자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대응의 문제점을 살피고, 또 이러한 복합적 상황이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흔히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의 어려움의 주된 원인을 남북간의 체제적 차이, 또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차이로 설명하거나, 탈북자 집단의 특성이나 개인의 능력 차이에서 발견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글은 그러한 일반적인 거대 문화론적 차이 설명이나 이주 집단의 성격규명보다 이들을 받아들이는 남한 사회의 논리 변화와 그 내부적 갈등에 주목하고자 한다. 분단과 전쟁, 냉전적 대치, 그리고 탈냉전 등 시대상황에 따라 각각 형성된 탈북자에 대한 남한사회 내부의 정치적 개념화와 사회적 인식, 그리고 사회제도와 정책적 대응이 더욱 직접적으로 이들의 삶의 조건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한 사회의 탈북자에 대한 인식은 각 시대 상황에 따라 분절적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라 분단사를 통하여 중층적으로 변화하였다. 주변정세와 남북관계가 여러 차례 극적으로 변화했지만 남북이 아직도 지속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탈북자에 대한 체제 경쟁적인 정치적 의미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다. 또한 남한 내부의 각 집단들 간에도 분단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혹은 그 극복을 바라는 입장에

따라, 탈북자에 대한 인식과 이해관계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식의 중층성과 다양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는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마구 혼재되어 버린 서로 다른 기대의 충돌과 이에 기인하는 대응방식의 혼란을 극복하기 어렵다. 특히, 오늘날 탈북자들이 현실적으로 하나의 이주민 소수자 집단을 형성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의 문제점과 도구적인 대응으로 인한 피해는 우선적 규명의 대상이다. 이 글은 탈북자에 대한 남한 사회의 인식혼란, 그러한 인식혼란이 탈북자들에게 야기하는 환상, 또 그 결과 나타나는 부적응의 문제를 밝혀보고자 한다.

2. 탈북 이주민에 대한 역사적 인식과 정책의 변화

1) 분단과 '체제 선택적 이주민'

해방 후 냉전과 분단으로 인해 남과 북에 각각 상이한 정치체제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각 체제의 성격에 따라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된 사람들이 자신의 근거지를 떠나 다른 체제로 이주하는 일이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 민족만이 경험한 일이 아니라 독일과 베트남 등 다른 분단국가에서도 공통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해방 직후부터 사회주의적 통치가 시작된 북으로부터 지주, 자본가, 친일부역자, 기독교 신자들과 일부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거 남으로 넘어 오고, 사회주의를 동경하는 남한의 진보적 지식인과 조직혁명가, 일부 노동자, 농민과 사회 활동가들이 정치적 탄압을 피해 북으로 넘어갔다. 이들은 각 정치체제의 입장에서 보면 '불법 월경자'들이지만 민족적 차원에서 보면 일종의 '체제 선택적 이주민'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체제로부터 정치적 공격을 받거나 감내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해

서 떠나 온 이들이 그 체제에 대한 가장 극렬한 비판자들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해방 후 6·25전까지 북으로부터 넘어 온 약 74만 명(Kwon 1977)¹⁾의 난민들은 ‘월남민’ 혹은 ‘이북사람’, 심지어 ‘38파라지’라고 불리며, ‘해방촌’과 같은 집단 거주지와 ‘서북청년단’과 같은 정치조직을 만들어 남한 사회 내부에 강력한 반공집단을 형성한다. 남으로부터 건너간 남로당 출신자들이 남조선 해방전쟁을 앞장서서 주장한 사실과 맥을 같이하는 일이다. 이들은 점점 대립적 국면으로 치달던 남과 북의 정치권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가장 좋은 사회집단이 되었다.

2) 전쟁과 ‘피난민’

6·25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극심한 전선 이동으로 인해 수백만의 ‘피난민’들이 발생하였다. 북으로부터 남으로 온 약 65만 명(Kwon 1977; 이용기 1998)²⁾의 ‘(월남)피난민’들은 남한 사회의 맨 밑바닥에서부터 맨 손으로 삶의 터전을 일구어 나가야 했다. 게다가 이들은 ‘적성지역 주민’이었던 사람들로써 가시적으로 반공을 주장하지 않으면 일상적으로 의심받고 차별 받을 수 있는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개인적 체험에서 우러나온 반공도 있었겠지만, 먼저 온 ‘이북출신’ 반공주의자들과의 결합이나,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 주장은 사회적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기도 했다. 이 시기에 월남피난민=기독교신자=반공주의자의 도식과 고정관념은 내외적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아 갔다. 행정적으로 이들은 ‘미 수복 지역 주민’으로서 이북5도청에 속한 ‘이북5도민’이 되었고 북진통일이 되면 바로 그곳의 도지사, 시장, 군수, 읍·면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명예 임명장을 주어 위촉하기도 했다. 북

1) 이용기(1998)는 남한출신 귀환자 수를 감안하여 그보다 약 20만정도 적은 수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민주평통자문회의(1998)는 약 328만 명으로 주장하고 있다. 즉, 이 시기 난민규모도 학계의 추정치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수가 정치적 이유에서 주장되고 있는 현실이다.

2) 민주평통자문회의(1998)는 1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다.

진통일의 선봉이자 통일 이후 북한 사회의 관리자로서의 자기 정체성도 이때 확립된 것이다.

전쟁의 상처가 아물고 조속한 통일의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점차 이들은 ‘피난민’에서 ‘실향민’으로 ‘이산가족’으로 불리기 시작한다.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남한 사회에 체류하는 북한 사람이라는 의미보다는 이제는 남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분단의 아픔을 그 존재로서 드러내는 희생자의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시킨 개념이다.

3) 냉전과 ‘귀순용사’

전쟁시 피난민들과 마찬가지로 북에서 남으로 왔지만 1962년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 원호법’이 제정된 이후에 온 극소수의 사람들은 ‘월남귀순자’로서 애국지사과 4·19의거 희생자와 나란히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된다. 5·16 쿠데타 직후에 군사정부가 분단 상황이 고착된 휴전선을 넘어서 군사적 기밀을 가지고 온 소수의 사람들을 특별히 처우해야 할 군사적 필요성에 입각한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국방부 산하의 원호처가 이들을 담당하였다. 유신치하인 1978년에 제정된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은 특별히 기밀을 가지고 오지 않은 민간인도 “그 집단에 항거하여 귀순”하면 ‘월남귀순용사’로서 필요한 보상과 원호를 하도록 하였다. 체제 경쟁의 논리가 극대화되어 월경행위 자체를 국가를 위한 유공 행위로 간주하고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로 처우한 것이다. 전쟁 상황의 논리는 이들이 가지고온 무기의 종류와 정보 가치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로금을 주도록 법으로 정했다.

또한 이들에게는 정착금과 주택을 제공하고, 북에서의 교육과 자격, 직업, 지위를 그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대우하도록 보장하였다. 주로 군인이나 외교관 출신이었던 이들은 일종의 정치적 ‘망명자’로서 정보제공이외에도 남한 자본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내외에 알리는 홍보 모델이

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생활수준을 남한의 중상층 이상으로 유지시킬 필요성이 있었고, 1993년까지 1년에 10명을 넘지 않았던 소수의 ‘귀순용사’들에 대한 그 정도의 처우는 행·재정상 아무런 무리 없이 집행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형성된 인식과 제도의 기본 틀은 일년에 국내로 입국하는 탈북자 수가 당시에 비해 100배 이상(2003년도 입국자 수: 1,281명)로 증가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4) 탈냉전과 ‘귀순북한동포’

사회주의 블록경제가 붕괴하고 북한의 사회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된 탈냉전 시기에 러시아로 간 벌목공과 중국으로 식량을 구하러간 북한사람들이 남한으로 들어오면서 탈북자에 대한 지원은 대폭 축소되게 된다. 김영삼 정부는 1993년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제정하고 담당부서를 국가보훈처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였다. 이 법은 공식적으로는 ‘귀순배한동포’ 또는 ‘귀순북한동포’에 대한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귀순’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이전의 ‘귀순용사’에 대한 처우와 비교해 볼 때 그 내용은 이들을 일종의 ‘경제적 난민’으로 보고 ‘생활보호대상자’ 차원의 보호개념으로 접근한 것이다. ‘탈북자’라는 용어가 언론기관을 중심으로 일상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부터이다.³⁾

3) 현재 법적으로 사용되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호칭보다는 ‘탈북자’란 용어가 더욱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라는 호칭은 탈북이라는 말이 ‘탈출’, ‘탈옥’, ‘탈주’와 같은 부정적인 느낌을 주고 게다가 도망자, 배신자, 노숙자처럼 ‘자’자를 붙인 것도 하나의 사회집단에 대한 비하적인 표현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이승현 2002: 1). 아직 뚜렷하게 새로운 용어가 정착되지는 않았지만,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용어는 ‘북한이탈주민’, ‘탈북이주민’, ‘탈북난민’, ‘탈북민’, ‘자유이주민’, ‘자유북한인’ 등인데 탈북인연합회는 적극적으로 탈출과 북한이란 용어가 들어가는 호칭을 거부하며 ‘자유이주민’을 주장하고 있다(2002년2월27일 공청회, 탈북인연합회). 그러나, 냉전시대를 통해 ‘자유’라는 용어를 표방하는 집단들이 보인 뚜렷한 정치적 성향에 대한 저항감 때문에 그리 폭 넓은 지지를 받고 있지는 못하다. 이 글에서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 시대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탈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남한사회에 새로운 이주민이라는 의미에서 ‘(탈북)이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

1990~93년까지 4년 동안 34명이 입국하는 불과했던 탈북자들이 1994년 한해에만 54명이 입국하였다. 이들은 그해에 개정된 ‘귀순동포 보호법’에 의해 정착지원금이 대폭 축소되어 보로금 등에 따른 개인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일인당 평균 700만 원의 정착금과 840만 원의 주거지원금을 받았다. 주거지원도 주택용자 자금의 용자알선 형식이었고, 취업도 본인에 한해서 취업요청을 해주는 정도였다.

이 시기에 들어온 ‘귀순동포’들은 1993년 이전에 들어 온 ‘귀순용사’들과 비교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1997년 이후의 ‘북한이탈주민’들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불리한 경제적 조건에서 남한 사회에 정착하여야 했다(윤덕룡 2000). 1998년에 통일부가 조사한 이 시기 귀순동포들의 취업률은 46.9%(전시기의 귀순용사들은 82.4%)였고 불과 13.6%(귀순용사, 47.1%)만이 월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현저히 낮아진 지원과 함께 낮아진 사회적 지위로 인해 탈북자들이 스스로를 주변화하여 남한 사회의 ‘이방인’, ‘2등 국민’으로 비하하게 되었다(유지웅 2000: 74). 이 시기 ‘귀순동포’들의 실업과 빈곤, 그리고 남한 사회 부적응 때문에 일으킨 사건과 사고의 급증은 1997년에 새로운 지원법을 제정하는 동기가 되었다.

5) 남북교류와 ‘북한이탈주민’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 때문에 탈북자들을 확대하고 있다는 보수주의자들의 비판과는 달리 김대중 정부는 IMF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이전의 김영삼 정부에 비해서는 획기적으로 확대된 지원정책을 추진하였다(박현선 2002: 223-227). 1997년에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은 성인 1인당 월 최저임금

다. ‘월남피난민’이 그냥 ‘피난민’으로 통용되었듯이 ‘이주민’이라는 말이 이들에 대한 호칭으로 정착될 수도 있으리라고 본다.

(474,600원)의 62배인 2,942만 원과 주거지원비로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 754만 원을 포함해 총 3,696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을 ‘통일의 시험대’로 보고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국내 정착 여부가 우리의 통일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라는 판단아래……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통일부 2002)”고 하였다. 또한, 통일부 산하에 ‘하나원’이란 정착지원시설을 설립하여 기본적인 조사가 끝난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2~3개월 동안 남한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였다(통일부 2001). 이러한 지원방식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남북한 사회문화통합의 ‘예비모델 실험’으로서 탈북자 정착지원 사업을 개념화하고 제도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김대중 정부의 재외 탈북자 정책도 주변국 정세와 남북관계를 고려한 “조용한 외교”라는 소극적인 입장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전 김영삼 정부의 공작차원의 선별입국 방침(한겨레21 1997)에 비해서는 최소한 해외공관에 도착한 탈북자들은 전원 수용한다는 방침을 지키고자 노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워낙 재외탈북자들이 절박한 인권 상황에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충분히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시기에 남북관계는 획기적으로 변화하였고 동시에 국내의 각 사회집단간에 남북관계와 탈북자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드러나서 서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렇게 격변하는 시기에 매년 거의 2배씩 늘어난 숫자(1998년 71명, 99년 148명, 2000년 312명, 2001년 583명, 2002년 1,141명, 2003년 1,281명)로 남한에 입국하게 된 ‘탈북이주민’들은 남한 사회 내부의 이들에 대한 인식혼란으로 인해 더욱 극심한 정체성의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전과는 또 다른 부적응의 문제를 안게 되었다.

3. 남한 내 각 사회집단의 탈북자에 대한 인식의 혼란과 갈등

1) '실향민' 과 '탈북자'

남한 사회 내부 집단 중 새로 온 '탈북이주민'들에 대해 가장 먼저 친밀감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집단은 이른바 '월남민', '피난민', '실향민'들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동향사람일 수도 있고 친척이거나 심지어 재상봉·재결합하게 된 '이산가족'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만남이 서로에게 편안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다. 초기의 반가움과 감격의 순간이 지나면 서로에 대한 이질감을 발견하고 실망하거나 서로에 대한 기대와 인식의 차이로 충돌하거나 소원해지기도 한다(임순희 1998). 심하게는 배신감을 느끼기도 한다. 특히 탈북자가 북한에서 월남한 가족이나 친척 때문에 사회적 정치적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경우 상봉 및 재결합 과정에서 갈등을 빚을 수 있다. 먼저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개인주의적인 엄격함과 남한 사회에 팽배한 중산층적인 배타적 가치관을 접하면 가족·친척·동향관계에 의지하고자 하거나 그들과의 밀접한 인간관계 속에서 안정을 얻고자 했던 탈북이주민들은 섭섭함을 넘어 배신감을 느끼기 쉽다.

이미 수십 년 남한 사회에서 생활한 월남민, 피난민들이 자신들과 같이 북한 체제를 벗어나 남한에 온 사람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최근에 온 탈북이주민들과 쉽게 일체감을 느끼거나 더욱 온정적일 것이라는 추론은 대부분 어긋나기 쉽다. 오히려 더 냉정하거나 비판적인 경우가 많다. 피난시절의 어려움을 맨몸으로 극복해낸 자수성가한 사람들일수록 정착금과 주택을 지원받고도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기보다는 답답함을 느끼면서 개인의 능력부족이나 정신자세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탈북이주민들이 북한체제나 북한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말이나 태도를 보이면 바로 자신들

의 생존의 열쇠였던 “반공주의 회로판”⁴⁾을 작동시켜서 “여기까지 와서도 김일성을 존경하고 있는 반빨갱이들”이라고 의심하기도 한다. 이들은 한국에 도착한 탈북이주민들 보다 차라리 스스로의 피난시절의 어려움을 더 가깝게 연상시키는 재외탈북자들의 절박한 삶과 일체감을 느낀다고 한다.

2) 기독교 선교와 국내의 ‘탈북자’

남한의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와 교회들은 세계 각 국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집중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곳이 중국이고 그 중에서도 조선족들이 밀집해있는 지역들이다. 북한의 기근 때문에 많은 난민들이 식량을 찾아 숨어 들어온 곳도 바로 이 지역이기 때문에 남한의 선교사들은 이들의 구호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정병호 2001). 중국 공안당국의 눈을 피해 이루어진 비밀구호활동이라 그 규모가 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주로 남한과 미국의 한인교회들의 지원을 받는 적어도 백여개소의 비밀시설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있다(Chung 2003). 문제는 가장 절박한 상황에 놓인 난민들에 대한 구호가 선교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선교의 효과는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이주민들의 90%이상이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사실로 나타난다.⁵⁾ 오늘날 북한 사회의 주민들 거의 대부분이 종교가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놀라운 일이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지 선교의 성격

4) 반공주의적 세계관의 일상적 내면화를 통해 특정한 자극이 주어지면 자동적으로 조건 반사적인 반공적 정치사고와 행위로 대응하게 되는 일종의 정치사회적 암시현상을 말한다(권혁범 2000).

5) 통일부 하나원에서 매 기수 입소자들의 90% 이상이 종교가 기독교(개신교)라고 한다. 그러나 전우택(2004)의 장기 추적 조사에 의하면, 남한 사회에 나와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초기에 78.9%(개신교 76.2%), 3년 뒤에는 63.6%(개신교 61.2%)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과 제3국을 거쳐서 한국까지 보내는 “서울행 지하철도”⁶⁾의 탑승자를 선별하는 구호기관의 선택과정을 알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한국에 도착한 탈북이주민들은 거의 모두 이러한 선교와 구호사업의 대상자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들이 체험한 기독교 선교와 이를 통해 형성한 남한사회에 대한 인식과 새로운 자아정체성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 식량난민들에 대한 구호와 선교 방식은 기독교 안에서도 교파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궁극적 목표를 탈북자 선교를 통한 북한 선교에 두고 있고 특히 많은 자금과 인력을 동원하고 있는 보수교단들의 선교는 전투적이라고 할 만큼 적극적이고 그 목적이 뚜렷하다. “중국안의 여러 곳의 비밀신학교와 비밀고아원에서 ‘선교특공대’를 훈련시켜서 북한에 들어가 1만 ‘지하교회’를 건설하도록 하겠다”⁷⁾거나 “꽃제비들 중에서 신앙심이 투철해진 아이들에게 십자가와 성경책을 감추고 북한에 들어가도록 해서 북한 땅에 신앙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⁸⁾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할 정도이다. 이러한 선교전략은 탈북난민들을 도구화하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는 현지의 다른 선교사들의 목소리도 있지만 바로 이렇게 ‘북한선교’를 겨냥한 웅대한 목표가 있어야 이들을 구호하는 헌금이 모아지는 것이 오늘날 남한 교회의 현실이라는 인식이 더욱 강한 편이다. 그나마 이들에 대한 대규모의 실질적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은 한국의 기독교계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교회에서 지원하는 비밀고아원이나 은신처의 하루 일과는 대부분 성

6) 지하철도(Underground Railway)는 남북전쟁 시기에 미국 남부의 흑인노예들을 북쪽의 자유주로 몰래 밀수했던 조직적 운동을 뜻한다. 중국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탈북난민들을 남한으로 데려오기 위한 이 일에는 2001년에 이미 60개(국내 입국 탈북자 수가 당시보다 4배로 증가한 지금은 더 많아졌을 것임)이상의 단체와 개인 활동가와 수천의 후원자가 간여하고 있다. 기독교 선교단체와 불교활동가 집단(2001년 추방되었음), 여러 나라의 합법 비합법 선교사들, 밀수꾼, 브로커, 매수된 경찰과 국경경비원, 미얀마의 마약밀매꾼과 반군, 남한의 우익 정치인과 최소한 9개국 이상의 외교관들까지 개입된 일이 되었다(*Newsweek*, March 5, 2001).

7)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북한 선교 및 탈북자 후원 캠페인 팸플릿, 1997.

8) 한 전도사와 인터뷰, 1999년 12월 29일 중국 연길.

경공부와 찬송과 기도로 꽉 짜여져 있다. 아이들을 위해서 남한의 교과서와 동화책들을 마련한 곳들도 있지만 잘못된 생각이 들어간다고 성경과 기독교 신앙에 관련된 책만을 읽도록 하는 곳들도 여러 곳이다 (Chung 2003). 이곳의 생활을 못 견디는 사람은 떠나가고 오래 남아 신앙심이 깊어진 사람들이 서울로 가는 ‘지하철도’를 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암담한 현실 속에서 점점 유일한 희망으로 다가온 남한은 ‘구원의 땅’이 되고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땅’으로 인식된다. 모든 위험과 고난을 넘어서 그 땅에 오게 된 자신은 분명 ‘선택받은’ 사람인 것이다.

이렇게 한국에 들어온 탈북이주자들은 자신을 구원해준 교회에서 신앙간증을 하게 되고 이는 재외 탈북난민들과 북한 선교를 위한 헌금으로 이어진다. 사회정착 초기의 탈북이주민들을 중국에서부터 보호하고 한국으로 데려온 교회나 단체가 아닌 다른 교파나 교회가 생활지원금을 주며 경쟁적으로 소속교인이 되게 하거나 신앙간증을 하도록 초청을 하기도 하는데 그리로 옮겨가면 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한편 이제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탈북이주민들도 자신들을 과거의 인연으로 속박하려는 사람들에게 대한 섭섭한 느낌을 갖는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절박할 때의 신앙심을 잃고 자신들도 교회를 도구화하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다수 나타나게 된다. 이는 다시 탈북이주민들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교회를 이용하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고정관념을 강화하게 한다.

3) ‘보수’와 ‘진보’의 대조적 대응

남한의 ‘보수적’ 사회단체들과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보수언론기관들은 국내외의 탈북자들에 대해 가장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 집단이다. 이들이 북한의 어려운 생활상과 폭정을 국내외에 알려줄 수 있는

증인이기 때문이다(박상봉 2001). 또한 탈북현상을 북한 체제 붕괴의 조짐으로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북한 체제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⁹⁾ 여기에는 미국과 일본의 보수집단과 언론까지 적극 동조해서 활발한 국제연대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¹⁰⁾

이 주장에 따르면 북한체제의 지배를 떠난 모든 탈북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남한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전원 남한으로 데리고 와야 한다고 보고 이를 못하고 있는 남한 정부는 대북 유화정책을 펼치는 '좌파정부'로서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해외의 탈북자들은 남과 북의 정권으로부터 모두 버림받은 '희생자'들이고 남한에 도착한 탈북자들도 정부의 햇볕정책 때문에 무시되거나 홀대받는다고 생각한다. 심지어는 요즘 남한에는 "북한 간첩이 많아서 위험하니 미국과 같은 제3국으로 망명하는 것이 좋다"고 권하기도 한다¹¹⁾. 실제로 최근 재외 탈북자들뿐만 아니라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중에서도 이러한 인식의 영향으로 미국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탈북자들을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용기 있는 사람들로 부각시키며, 남한에 도착하면 귀순용사로서 대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현실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기에 좋은 상대가 된다. 이러한 불만들은 진위에 관계없이 비판적인 기사로 증폭되어 탈북이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사업이 "영망진창(주간조선 2001.

9) 플러첸(Vollertsen 2001)을 비롯한 탈북 '기회망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모두 대량 탈북유도가 북한 체제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서재진(2002), 이신화(2002), 정병호(2004) 등은 베트남, 쿠바 등의 난민문제 사례와 비교하여 탈북자의 대량 유출이 북한 체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10) 탈북 난민문제는 미국에서는 북핵문제, 일본에서는 납치문제와 더불어 관심사가 되었다. 이들에 대한 큼직한 기사와 칼럼이 주요 언론에 수시로 실리고, 특히 워싱턴의 미국 상하원 청문회의 주요 주제로도 자주 등장한다. 2003년 말부터 미국 상하 양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North Korean Freedom Act도 이들의 인권문제와 북한체제에 대한 정책을 결부시킨 내용이 큰 줄기를 이루고 있다.

11) 2002년 5월 9일 선양의 미국총영사관으로 들어간 8명의 탈북자들이 증언한 이후 중국에서 외국공관에 진입한 여러 탈북자 집단에서 미국망명을 요구하는 근거로 '남한의 북한 간첩'을 이야기한다.

3. 8)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국내의 탈북이주민들이 자신들은 “잘 대접받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어렵고 비참하게 잘 못 살고 있다”고 느끼는 데는 이러한 언설이 조성하는 사회 분위기도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이다.

이에 비하여 남한 내부의 다른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활발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나 진보적 운동단체들은 대체로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통일문제나 북한과의 직접 교류에 적극적인 단체일수록 재외 탈북자들의 인권문제나 국내의 탈북이주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침묵과 무관심과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내외의 탈북자들을 동정은 하지만 남북교류와 화합의 ‘걸림돌’이나 ‘숨겨야 할 존재’로 여기는 것이다. 심지어 다른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국가인권위원회조차 “믿을 만한 계량적인 통계가 부족해서 이 문제에 대해 활동할 수 없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한편, 북한 정권에 대해 뚜렷하게 호의적인 몇몇 단체들은 “한 번 배신한 사람들의 말은 믿을 수 없다”는 논리로 이들을 경원하기도 한다. 이러한 태도는 북한 체제에 의해 ‘역적’, ‘반역자’, ‘배신자’로 규정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상처받고 일말의 죄책감까지 느끼고 있는 탈북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 이곳에서까지 자신들을 그런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는 것이다.

4) 정부기관별 인식차이

제3국 체류 중의 극단적인 생존위기 상황에서 뚜렷한 도움을 주지 못했던 남한 정부, 특히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역할에 대해서 탈북자들은 근본적인 불신을 갖고 있다. 정부의 “조용한 외교”가 주재국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한 현실적인 정책이었다고 하더라도 생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식량난민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구호와 지원노력이

없었다는 사실은 불신을 초래하기에 충분한 사유가 된다. 외교적으로 안전한 지대에 도착한 극히 일부의 탈북자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최소한의 보호조치는 있지만, 그 영역 밖의 대부분의 탈북자들의 생존과 인권은 일반적으로 무시되었다(윤여상 2001).

도착한 후에도 이들을 담당하는 정부의 각 기관마다 접촉하는 공무원마다 각각 다른 인식과 태도로 이들을 대한다. 탈북 동기를 조사하는 국방부 사람들은 ‘간첩’으로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취조하다가, 갑자기 ‘귀순용사’로 대접하며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일거에 보여주려고 애쓰는가 하면, 통일부 직원들은 ‘귀순동포’로 ‘북한이탈주민’으로 동정하다가, 동회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영세민’으로 취급하고, 노동부에서는 ‘실업자’로 ‘실직자’로, 사실상 ‘무자격자’, ‘무능력자’로 대한다. 경찰에서는 ‘감시대상자’이자 ‘보호관찰’이 필요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때로는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고뭉치”로 여기면서 사고를 쳐도 특별히 봐주기도 한다. 학교에서는 탈북아동들은 ‘지진아’로 그 부모들은 ‘이상한 학부모’로 여기기 쉽다. 이렇게 다른 입장에서 다른 태도를 보이는 공공기관들을 연속적으로 접촉하면서 탈북이주민들은 자신들이 대한민국에서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혼란스런 정체감을 갖게 된다.

4. 탈북이주민들의 환상과 대응전략, 그리고 부적응

1) 기독교문화와 ‘선택받은 사람’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최초로 의미 있게 접촉하는 남한문화는 기독교 문화이다. 그것도 대부분 가장 열성적인 복음주의적 기독교 선교사들이나 신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이다. 집중적으로 성경공부를 하고 찬송가와 통성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믿음체계의 치환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의

식·무의식인 선교전략과 효과적으로 맞물려있다. 즉, 북한에서 일상적으로 행했던 주체사상학습과 수령의 일화 익히기와 열심히 혁명가를 불렀던 것과 비슷한 일로 여기는 것이다. 똑같은 열심과 집중된 노력을 기울이면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보상된다고 믿는다.¹²⁾ ‘신자’가 되는 것은 ‘당원’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한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는 길이라 여긴다. ‘착한 신자’는 ‘열심당원’처럼 선택받고 구원 받는다. 실제로 맨몸의 탈북자가 ‘구원의 땅’ 남한으로 올 수 있는 길은 거의 그 길밖에 없다.

모두가 곧이곧대로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이들은 한 체제의 화려한 이념과 현실간의 엄청난 괴리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이런 믿음을 선교집단이 강요하는 구호시설의 상황논리로 파악하고 그곳에 있을 때만 잠정적으로 몸을 맡기는 경우도 많다. 한 탈북청소년은 남한에 오기 위하여 성경구절 천 개를 외우고 ‘착한 신자’로 선택되어 남한에 도착하자마자 이를 비웃었던 사례도 있었다.¹³⁾

문제는 절대적이라고 여겼던 기독교 교리가 남한 사회에서 북한의 주체사상만큼 절대적인 이념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발생한다. 기독교 신자도 남한 사회 내부의 한 사회집단에 불과하고 같은 기독교라도 다른 방식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종교적 다양성과 접하게 되면 혼란은 더 커진다.¹⁴⁾ 여기에 더 해서 남한 교회의 세속적인 측면까지 접하게 되면 교회와 신앙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심이 일거에 무너져서 그나마 지탱해온 삶의 지향점(흔히들 ‘삶의 원리’가 필요하다고 한다)이 흔들려서 자포자기 상태가 되거나 극도로 냉소적 태도를 갖게 된다.

12) 북한 의사 출신 탈북여성 인터뷰(1998.6.13). 북에서 ‘모범적인’ 삶을 사는 자세에 비추어 남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곳의 중심원리인 기독교사상을 따라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한다.

13) 통일부 하나원 하나들학교 청소년 인터뷰(2001.10.8).

14) 탈북자들이 제3국 체류 중에 접한 선교단체에 따라서 불교 등의 다른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천주교는 물론이고 개신교 중에서도 다른 교파의 신앙을 이단시하는 사고가 강하게 주입된 경우도 많다.

2) '환영', 그리고 환상과 소외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진퇴양난의 절망적인 상태에 있던 중국에서 제 3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한다. 이들은 처음에 '환영'을 받는다. 고난과 위기와 생사의 갈림길을 넘어서 긴장 속에 도착한 곳에서 환영을 받으면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통과의를 거친 셈이다. 자신들이 익숙한 북쪽식의 '영웅'의 이미지와도 일치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이다.

입국초기에는 엄중한 조사와 답답한 수용과정을 거치지만 기본적으로는 처음부터 체제 경쟁적인 대접을 받는다. 정장 양복에 넥타이를 매고 새 구두를 신고 롯데월드로, 63빌딩으로, 에버랜드로 다니면서 남한 사회의 화려함을 만끽한다. 쇼핑할 돈을 받아서 워크맨과 핸드폰, 썬글라스를 사고, 입고 싶었던 옷들도 골라 본다. 앞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마음을 누르지만 이미 '특별한 존재'가 된 자신이 화려한 놀이공원 같은 남한 사회를 거닐 때 그 설렘을 감추기 어렵다고 한다.¹⁵⁾ 이후 남한 사회에서 여러 차례 좌절을 경험한 후에도 이때 자리 잡은 환상을 떨쳐 버리기 어려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다.

일단 거주지를 배치 받고 일상생활을 시작하면 대부분의 탈북이주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들에 봉착하게 된다. 가족과 함께 온 사람들은 조금 덜 할 수도 있지만 일단 밀려드는 외로움과 소외감에 모두가 괴로워한다. 그 동안 알게 된 탈북이주민들끼리 서로 전화하고 방문하고 함께 자고하면서 이를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충족되기에는 탈북이주민의 절대 수가 너무 적고, 정부의 지방배치 정책¹⁶⁾으로 혼자 지방도시에

15)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탈북 청소년들이 겪는 적응상의 어려움에 대한 자세한 민족지적 관찰 기록은, *The New York Times Magazine*, "The Flight of the Fluttering Swallows," 2003. 4. 27. 참조.

16) 탈북자들이 하나원에 있는 동안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의 공급 상황에 따라 추첨을 하여 전국적으로 분산 배치된다. 그러나 탈북자들 대부분은 북에서 경험한 평양과 그 이외 지역의 극심한 삶의 질 차이에 대한 기억 때문에 남한 사람들보다도 더욱 치열

떨어져 배치된 사람들은 정말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이라고 한다.

생소한 아파트 문화가 새로운 이웃과의 소통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남한 사람들과의 교류는 담당행사나 교회나 복지기관의 자원봉사자들로 국한된다. 학교나 직장 등 어느 곳을 가든지 특별한 존재가 되어버린 자기 자신에 대한 당혹감을 참기 어렵고, 남들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차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기 쉽다. 영구임대주택 아파트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인 자신이 경쟁 사회인 남한에서는 밑바닥 계층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초조감과 절망감마저 느끼게 된다.

탈북 이주민들이 정착 초기에 자신들만의 특별한 경험을 하나의 '상징자본'으로 활용하여 여러 단체나 교회 등에서 강연이나 간증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남한 사회의 각 집단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자신의 비참한 과거의 경험과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신에 대한 것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모멸감 때문에 갈등하게 된다고 한다. 교회에 가서 간증하고 난 날 밤에는 받은 돈으로 만취되도록 술을 마신다는 탈북청소년들도 있다. 그래도 남한 사회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개강연과 신앙 간증의 기회는 자신이 특별한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많지 않은 기회이다. 그러나 되풀이 될수록 자신을 초청한 집단이 갖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인식과 기대,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춘 이야기를 하게 되기 쉽다.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 남한 사회 속에서, 남한 사회의 시각에 맞춘 '자신'을 만들어 간다고도 할 수 있다.

한 서울지방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 지방에 배치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손해를 무릅쓰고 1~2년 내에 서울로 오기도 한다. 정부로서는 수도권 집중을 막는다는 일반원칙을 고수하고자 하는 측면 이외에도 탈북자들이 한 지역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면 사회정치적 불안요인이 커질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한편, 이민이나 난민문제 전문가들(Robinson 1998; 윤인진 2000)은 이주자들의 장기적인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그들 간의 공동체적 연계망(커뮤니티) 형성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3) '상징자본' 과 적용전략

스스로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탈북이주민들의 일부는 편법으로라도 그것을 해줄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일단 지역사회의 업소나 회사들에 영향력이 있는 담당형사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배치 받은 지방도시가 싫으면 서울로 오기 위해 예를 들어 한나라당(민주당이 아닌) 통일외교분과 국회의원에게 탄원하기도 하는 식이다.¹⁷⁾ 자신을 보호해주는 남한 민간단체가 믿음직스럽지 않으면 '국경없는 의사회'와 같은 외국기관의 사무실로 달려가서 맹장수술을 해 달라고 애원하기도 한다.¹⁸⁾ 그러한 이례적인 부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왜곡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런 말들은 비판거리를 찾고 있는 보수언론의 이해와도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또 한번 국내이주탈북자 문제는 증폭된다.

장기화된 기근 상황 속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탈북과정에서 오랜 학습공백이 있는 탈북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남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¹⁹⁾ 그러나 이들은 지방에 있는 소규모의 초라한 대안학교들을 기피하고, 오히려 서울의 유명한 큰 학교나 '민족사관고등학교' 같은 특별하게 유명한 학교에 가고 싶어 하기도 한다. '귀순용사'들을 받아들였던 남한 명문대학의 '특례입학제도'는 북한에서 고등중학교 졸업학력(남한의 고등학교 1년 수료에 해당하는 교육기간)만 있으면, 기초학력이 부실해도 연·고대의 유명학과나 '최소한' 한양대나 한

17) 한나라당이 야당이지만 압도적인 다수당이었던 2001년도의 사례. 탈북 이주민들을 도와주던 남한 사회단체들의 정치성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무수한 위기를 넘어 온 탈북자들의 정치적 생존전략의 일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18) 이들은 현재 모두 의료보호 및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기본적 사회복지 혜택을 받고 있지만, 한국 보다 더 잘 사는 외국에 가거나, 외국기관에 의지하면 더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강하다.

19) 정병호·정진용·전효관·이부미(2003)의 연구에 의하면, 학령기의 탈북 청소년 중 38%만이 현재 남한 학교에 재학 중이다.

국의국어대 정도에 입학이 가능하도록 한다.

명문대학 입학과 이를 통한 학연 창출은 남한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문화적, 상징적 자본 을 동시에 축적할 수 있는 길이다. 같은 맥락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것과 선진 외국과 연결된다는 것은 모두 중요한 상징자본이 된다. 탈북이주민들도 이러한 남한 사회의 차별적 위계서열을 간파하고 ‘탈북자’라는 일종의 ‘상징자본’을 활용한 생존 전략으로 명문대학 입학, 서울이나 수도권 거주, 미국여행(미국 국회나 교회에서의 증언, 유학, 이주 등)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문제는 남한 정착 초기에 다른 기본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특별한’ 해결 방식에 되풀이 의존하게 되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황에 대한 장기적 적응능력이 개발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남한에서도 경쟁이 심한 명문대에 입학한 대다수의 탈북자들은 학점을 받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 두게 되는 낭비적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²⁰⁾

탈북이주민들이 모두 갖기 쉬운 이러한 환상을 일찍 떨치고, 유희 당하기 쉬운 손쉬운 해결방식을 참으며 우직하리만큼 자신의 노력으로 적응능력을 개발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어, 4년제 대학보다는 ‘정수직업학교’를 택해서 기술을 익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서 회사 사람들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만들며 살아가는 청년도 있고, 보장된 대학 특례입학을 늦추고 회사에 취직해서 단순한 사무업무부터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키우고 있는 여성도 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노력으로 작은 성취를 축적해 가면서 자신감을 얻어, 다음 단계에 도전해 나가는 꾸준한 태도 때문에 주변의 남한 사람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기 쉽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한 사회의 많은 선의의 후원자들이 오히려 그러한 과정을 답답해하며 남보다 빨리 가도록 특별한 길을 마련

20) 35세 이하의 탈북자들이 대학을 다닐 경우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통일부는 2학기 이상 평점 C학점 이하의 성적일 경우에는 장학금 지원을 중단한다. 이런 경우, 대다수가 외부적으로는 학생신분을 유지한 채 실제로는 장기 휴학 상태로 있다가 학교를 그만 두는 경우가 많다.

해 주는 것을 자신의 능력인양 과시하는 경향이 있다.

탈북 청소년들도 대학 입학에 대한 조급함을 누르고 자신의 학습능력을 키우고자 나이보다 낮은 학년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충분히 시간을 두고 기초학력과 사회 상식 등을 충분히 다지는 여유 있는 자세를 가질 경우에 남한 교육제도에 장기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탈북자라는 사실을 감추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자신의 정체성을 뚜렷이 밝히면서도 예외적인 특별한 처우를 바라지 않는 당당한 주체적 노력이 자신과 주변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설정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한다.²¹⁾

5. 결론과 제언

탈북자들에 대한 남한 사회 내부의 인식혼란은 시급히 극복되어야 한다. 이주민인 이들에게 환상을 심어주고 남한사회 적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하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식혼란이 남한 사회의 각 사회집단들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로 인해 촉발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탈북자 문제의 편파적이고 정략적인 이용을 견제하여야 한다. 이는 탈북자들을 도구화한다는 윤리적 차원의 문제에 더하여 국내의 탈북자들의 실상을 왜곡하여 이들의 인권을 현실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탈북자의 문제는 마땅히 “탈정치화”하는 동시에 보편적인 인권문제로 접근하고 해결책을 강구해야한다(제성호 2002).

탈북자에 대한 인식혼란은 대부분 냉전논리로 고착된 사고방식으로 이 문제를 보는 것에서 초래된다.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보고,

21) 통일부 하나원의 하나둘학교와 늘푸른학교의 합동교사 간담회 자료집(남북문화통합교육원, 2003).

국제법상 이미 지위를 획득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국가로 기능하고 있는 북한의 주민들을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문제이다. 국내법의 논리로 이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한다고 하여도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현실 때문에 모두 남한으로 데려올 수는 없다(서재진 2002). 독일에서처럼 탈북자의 증가가 바로 북한체제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베트남과 쿠바같이 수십만 명의 탈출이 체제 자체에 전혀 영향을 못 미쳤던 사례들을 쉽게 간과한다(정병호 2004). 제3국, 특히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탈북자들이 남한에 오기를 희망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족과 생업과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사회관계가 있는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한다. 국내로 들어온 탈북자들을 ‘귀순용사’로 대접해서 더 많은 탈북자들이 나오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거나, 북한 해방의 전위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대다수의 국내 이주 탈북자들이 원하는 바도 아닐뿐더러 정체성의 혼란만 초래하여 사회 부적응을 유발하게 된다.

북한의 경제난이 해결되지 않는 한 살길을 찾아 북한을 떠나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다. 남북교류 등으로 바깥사정이 알려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밖으로 나올 것이다. 탈북자 문제는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탈냉전 시대에 남북한 사회가 함께 적응해야만 할 하나의 필연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²²⁾ 이 문제를 북한 체제 위협의 도구로 삼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탈북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사람들의 안위마저 위협하는 일이 된다. 탈북자 문제의 탈정치화는 국내외적인 당면과제이다.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한 이주민으로

22) 바로 동서독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1989년의 대량 탈출 이전에도 동독으로부터 매년 4천 명에서 7천 명 정도의 탈출자가 꾸준히 있었다. 서독은 이들 불법적 탈출자의 두세배에 달하는 매년 8천에서 2만에 가까운 합법적 이탈자들을 공식협상과 비밀거래를 통해 불러 들였다. 이 때 서독은 이들을 절대로 동독체제를 약선전하는 고발자나 증인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켰다. 또한 대량 탈출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서독정부와 언론은 “동독붕괴”와 같은 위협적인 추측 개념을 언급하지 않았다(Kaack 2002).

받아들여야 한다. 우선, 이들에게 냉전시대의 환상을 심어줄 수도 있는 체제경쟁적인 정책과 제도와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 절대적 소수자인 이들이 생소한 남한 사회에서 외로움과 고립감에 고통 받지 않도록 새로운 인도적 차원의 복지와 교육과 노동의 기회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받아들여서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다른 사회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안보적 우려에서 이들을 분산시키기 보다는 이들 간의 공동체적 연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탈북 이주민들 스스로도 남한 사회의 각 집단들이 그들에게 투사하는 이미지에 좌지우지되기보다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남한 사회에 새로운 소수자로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존재를 밝히고 살 수 있는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로서 변화하고 있는 남북관계 속에서 스스로 도구화되지 않고 자신들만의 독특한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분단시대를 극복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일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권혁범

2000 “반공주의 회로판 읽기,” 『탈분단 시대를 열며』, 삼인.

박상봉

2001 “탈북자 현황과 대책,” 『탈북자 실상 및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 pp.29-36.

박현선

2002 “탈북자 국내 정착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북한연구학회보』제6권(1): 209-240, 북한연구학회.

서재진

2002 “탈북자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실태와 대책,”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 국가안보통일포럼 정책자료집 III, pp.9-23.

유지웅

2000 “탈북자들의 사회적 지위 변화와 주변화의 문제,” 『공안연구』61: 67-75.

윤여상

2001 『재외탈북자』, 서울: 열린포럼.

윤인진

2000 “탈북자의 자립정착을 위한 자조모델: 자영업 기반형성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104:143-183,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윤덕룡

2000 “탈북자 적응의 사회경제적 문제: 보호경찰관에 대한 설문결과를 중심으로,” 『통일연구』40(1): 65-92,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이승현

2002 “북한 이탈 주민: 현황과 대책,” 『입법정보』72:1-20.

이신화

2002 “재외 탈북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 현황과 과제,”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 국가안보통일포럼 정책자료집 III, pp.51-72.

이용기

1998 “이산가족 연구 어디까지 왔나,” 『역사비평』, 1998년 가을호: 252-270, 역사비평사.

임순희

1998 “한국통일과 해외한인: 남북한간의 인적통합문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응방안,” 『98년도 통일문제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pp.109-131,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성호

2002 “해외 탈북자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향,” 『서울국제법연구』9(1): 21-73, 서울국제법연구원.

전우택

2004 “남한 내 탈북자들의 3년 추적조사,” 『다가서는 남과 북, 만남과 공존의 모색』, 남북문화통합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한양대 민족학연구센터.

정병호

2001 “분단의 틈새에서: 탈북 난민의 삶과 인권,” 『당대비평』16:236-255, 삼인.

2004 “탈북 난민문제의 탈정치적 해법” 『다가서는 남과 북, 만남과 공존의 모색』, 남북문화통합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한양대 민족학연구센터.

정병호 · 정진용 · 전효관 · 이부미

2003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학교설립 타당성 연구』교육정책연구 2003-공모-7, 교육인적자원부.

플레첸, 노베르트

2001 『미친 곳에서 쓴 일기』, 월간조선사.

Chung, Byung-Ho

2003 “Living Dangerously in Two Worlds: The Risks and Tactics of the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in China,” *Korea Journal* 43(3):191-211, Seoul: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Kaack, Hans-Juergen

2002 “독일로부터의 교훈: 서독의 동독 이주자 처리방안,” 『A New Phase of North Korean Refugees Issues: Problems and

solutions』, The 13th KIMS international conference. pp.78-93.

Kwon, Tai-Whan

1977 *Demography of Korea*.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Robinson, W. Courtland

1998 *Terms of Refuge: The Indochinese Exodus and the International Response*. London: Zed Books.

〈자료〉

국회안보통일포럼, 피랍탈북인권연대

2002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 - 탈북자 문제 현황과 국제적 공조방안』, 국가안보통일포럼 정책 자료집 III.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998 『남북이산가족 재회 현황 및 과제』인권보장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자료.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2002 『탈북난민』, 여름호, 서울: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탈북인연합회

2002 『북한이탈주민 호칭,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 자료집.

통일부

2001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개선방안 연구』, 서울: 통일부.

200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서울: 통일부.

『시사저널』 “탈북청소년 ‘나는 학교가 싫어요,’” 2002. 2. 7일자, pp.42-44.

『주간조선』 “탈북자 정착교육 ‘영망진창,’” 2001. 3. 8일자, pp.34~36.

『한겨레21』 “좌절된 신들리의 꿈,” 1997. 12. 11일자.

『뉴스위크』 “탈북자의 험난한 행로,” 2001. 3. 5일자.

The New York Times Magazine, “The Flight of the Fluttering Swallows,”

2003. 4. 27.

<Key concepts>: North Korean refugees, South Korean society,
maladaptation, minority, discrimination

Illusion and Maladaptation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The Influence of the Confusions in Perception by the South Korean Society

Byung-Ho Chung*

This paper looks at the effects of the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by the South Korean society, and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s among different social groups. It also examines their effects on the North Korean refugees' adaptation to the South Korean Society, and the problems in government policy. The difficulties the North Korean refugees face in adapting to the South Korean society have often been explained in terms of the grand differences between the socialist and capitalist cultures. Instead, this paper focuses on the changes and conflicts in the logics of the South Korean society. Civil war and separation, cold war, and the post cold war periods have each formed particular political conceptualizations and social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in the South, which in turn have instigated concomitant political reactions. These factors have all been constituting the social environments for the

* Associate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North Korean refugees.

The international political atmosphere and the South-North relations have changed dramatically, but the conceptualization of the refugees has not gone through a fundamental change due to the rivalry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perceptions of, and also the interests in, the North Korean refugees have also varied among social groups in South Korea due to the discrepancies in their views on the issues of separation and unification. As the North Korean refugees are starting to form a considerable minority group in South Korea, the outdated perceptions and instrumental reactions of the South Korean society should be examined closely.